



2022.2.14.

국회미래연구원 | 국제전략 Foresight | 7호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한국외교에의 함의와 의회의 역할 :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global innovation leader)” 비전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제전략 Foresight

2022. 2. 14

Vol. 07

ISSN 2734-0686

발행일 2022년 2월 14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제전략 Fore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수시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 보고서로서, 미래연구원 내·외부 전문가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미래를 전망하고 국가차원의 국제전략을 제시합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한국외교에의 함의와 의회의 역할
: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global innovation leader)” 비전

국제전략연구센터장 차정미

요약

I. 서론

II.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III. 세계 전략의 특징과 한국외교에의 함의

IV.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와 한국의회의 역할

참고문헌

요약

- 기술혁명과 국제질서의 변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첨단기술은 미중간 패권경쟁의 핵심공간이 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세계는 ‘기술 신냉전(tech cold war)’ ‘디지털 신냉전(digital cold war)’의 가능성을 논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 세계경제의 양분화(bifurcation)와 탈동조화(decoupling)에 대한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심화는 단순히 미중 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저마다의 전략적 방향과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미중기술패권경쟁이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전략적 고민은 단순히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고민과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세계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미중기술패권경쟁의 심화에 대한 세계의 전략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외교전략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미중기술패권경쟁 시대 의회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 세계의 인식과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외교전략적 방향과 의회의 역할을 제언한다.
 - 국회미래연구원은 2021년 국제전략연구센터 연구과제로 <미중기술패권경쟁의 미래>를 설정하고, 국내 13명, 해외 13명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전 세계 주요국들의 인식과 전략을 분석하고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를 전망하는 글로벌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¹
 - 본 연구는 국내외 학자들의 분석결과에서 드러난 세계 주요국(일본, 러시아, 인도, 독일, 호주, EU, 아세안,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인식과 전략을 토대로, 한국의 외교전략 방향과 의회의 역할을 제언한다.
- 국내외 연구진들의 분석을 토대로 필자가 정리한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한국외교에의 함의와 의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세계 주요국들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장기화-구조화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나, 완전한 디커플링은 기술경제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중국 기술의 글로벌 영향력은 지속 확대될 수 있으나, 중국의존에 대한 위협인식도 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을 둘러싼 미중간 기술영향력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 2021년도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의 공동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결과는 국내 연구진들이 참여한 『미중기술패권경쟁의 미래: 세계의 전략과 한국외교에의 제언』와 해외 연구진들이 참여한 『The Future of US-China Tech Competition: Global Perceptions, Prospects, and Strategies』 등 두 권의 보고서로 발간된다.

- 세계 주요국들은 모두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자국의 경제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중 양국으로부터 오는 선택의 압력을 극복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저마다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는 전략은 각국의 기술수준, 경제환경, 외교관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나, 대체로 세계 전략의 핵심키워드는 디지털화와 기술혁신(기술주권), 실리적 접근, 경제안보, 외교다변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필자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시대 한국의 중장기 외교비전으로 ‘글로벌 혁신선도국가(global innovation leader)’를 제시한다. 세계국가들의 혁신경쟁이 가속화되는 오늘날, 기술혁신이 곧 ‘전략적 자율성’의 토대이며, ‘경제안보’의 핵심이다.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글로벌 위상과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혁신적인 국가(most innovative state)’로서 핵심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최근 유럽이 강조하고 있는 ‘개방적 기술주권(open technological sovereignty)’ 전략은 한국에 전략적 참고가 될 수 있고, 글로벌 협력의 공간이 될 수 있다.
- 의회는 한국이 개방적 기술주권(open technology sovereignty)을 토대로 ‘글로벌 혁신선도국가(global innovation leader)’로 부상하도록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2대 전략목표와 7대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I. 서론

1.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역사의 부활’?

1989년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을 통해 서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의 절대적 승리로 20세기 이념전쟁의 역사는 끝이 났다고 선언하였다.² 그리고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미소 양극의 냉전질서는 종언을 고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이 새롭게 회자되고 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서구주도 질서는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자유없는 부(wealth without freedom)’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새로운 냉전의 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³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신기술의 급격한 부상 속에서 새로운 산업혁명의 도래를 논하는 오늘날, 세계 정치는 이렇듯 다시 20세기 냉전의 역사를 소환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간 교역과 교류가 증대되고, 인터넷 공간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이동과 소통으로 명실상부한 지구촌이 되어 갔다. 탈냉전 직후의 질서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일극질서와 유럽공동체(EU),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양한 지역통합기구의 부상과 함께 다자질서가 함께 발전해 갔다. 1978년 개혁개방 선언 이후 세계질서 속에 편입되어 왔던 중국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질서 속에서 그 누구보다 높은 성장률로 빠르게 부상하여 왔다. 그러나, 급속한 중국의 부상, 그것도 공산당 영도의 일당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뤄가고 있는 중국의 지속성장은 역사의 종언을 외쳤던 서구 자유진영의 자신감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중국도 경제성장과 중산층의 확대와 함께 민주화의 과정을 경험했던 다른 국가들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서구의 전망과 기대는 빛나가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미국과의 국력격차를 급격하게 좁혀가고 있으며,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을 목표로 중국공산당 영도 하의 권력집중과 국민적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부상과 도전이 냉전 이후 지속되어 온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위협할 수 있고, 서구주도의 개방되고 자유로운 세계질서(open and liberal order)에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미국의 대중국 관여전략의 실패를 토론하고 있다.⁴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권위주의의 부상과 위계적 국제질서의 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² Francis Fukuyama (1989).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16, 3-18.

³ Timothy Stanley and Alexander Lee (2014). "It's Still Not the End of History." The Atlantic. 2014.09.01.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4/09/its-still-not-the-end-of-history-francis-fukuyama/379394/>

⁴ Harry Harding (2015), "Has U.S. China Policy Failed," The Washington Quarterly, 38 (3). pp. 95-12.

협력국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유질서 수호를 위한 대중국 견제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미중 양대강국의 패권경쟁은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라는 지정학 경쟁을 넘어 서로 다른 체제와 가치의 경쟁이라는 이데올로기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경제력, 기술력 경쟁이 이념경쟁과 연계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디커플링(decoupling), 기술냉전(Tech Cold War), 기술분단(tech divide)의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2. ‘G2 and the Rest’: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미중 기술패권경쟁은 단순히 미중 양국에 경제적 안보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안보적 영향이 심대한 요소이다. 국제질서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이 급격히 전개되는 오늘날, 세계 각국은 이러한 미중기술패권경쟁이 자국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면서 미중 양대강국으로부터 오는 선택의 압박과 경제적 전략적 이익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미중기술패권경쟁은 지속될 것인가? 미중기술패권경쟁의 미래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한국만의 질문과 과제가 아니며, 세계 국가들이 공유하는 질문이고 과제이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세계 각국의 인식과 전략은 주요한 요소이다. 최근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은 미중전략경쟁과 미래질서 관련 포럼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미래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양국간 전략경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⁵ 미중기술패권경쟁의 미래를 구성하는 것은 미중 양국 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세계의 인식과 대응이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와 한국의 외교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주요국들의 인식과 전략에 주목하였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대다수의 기존연구들이 미중 양국의 전략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G2 이외의 국가들이 바라보는 G2의 기술패권경쟁, 그리고 이들이 전개하고 있는 전략적 방향들을 살펴보면서 이를 토대로 한국외교에의 함의와 의회외교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5 Bloomberg New Economy 포럼 <Great Power Competition: The Emerging World Order>에 참여한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발언. 2021.11.19.

II.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미중기술패권경쟁을 바라보는 세계의 인식과 전략은 무엇인가?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는 2021년도 연구에서 <미중기술패권경쟁의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20여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미중 양국의 인식과 전략은 물론 G2 이외 국가들(일본, 러시아, 인도, 호주, 독일, EU, 아세안, 중남미,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인식과 전략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세계의 인식지형과 전략적 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⁶ 본 장은 본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세계의 인식과 전략의 주요내용을 종합분석한 것이다.

1. 세계는 미중기술패권경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세계 주요국들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자국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안보적 영향에 주목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첨단기술이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술 냉전(tech Cold War)의 부상과, 디지털 경제의 이원화(bifurcation)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유럽 12개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미중 양국간의 새로운 냉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⁷ 실제 세계 주요국들의 인식과 전략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나타난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에 대한 세계의 전망은 기술이 미중 양국간 전략경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장기화, 구조화될 것이라는 데에 높은 인식의 공감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상호의존으로 인해 완전한 디커플링과 세계경제의 양분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첨단 기술분야의 우위가 미래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첨단기술분야의 경쟁과 디커플링 시도는 지속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와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이 강대국 경쟁에 있어 전통적인 '전략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경쟁은 점점 더 지정학 경쟁, 안보이슈, 나아가

6 세계 인식과 전략 분석에 참여한 국내연구진은 차정미(연구책임, 국회미래연구원), 정성철(명지대), 백서인(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기태(통일연구원), 장세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백우열(연세대), 김주희(부경대), 박재적(한국외대),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박지원(KOTRA),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전해원(국립외교원), 강문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기수(한국외국어대); 해외연구진은 Chungmin Lee(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Zike Qi (Peking University), Kazuto Suzuki (University of Tokyo), Ivan V. Danilin (MEMO, Russian Academy of Sciences), Markus Jaeger (Germ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ingdong Yuan (University of Sydney), Selina Ho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Csaba Moldicz (John von Neumann University, Hungary), Oliver Stuenkel (Fundação Getulio Vargas), Kozhirova Svetlana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in Kazakhstan), Kairat Maratovich Batyrbayev (Eurasian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Joseph A. Kéchichian (King Faisal Center for Research and Islamic Studies), Rahmane Idrissa (Leiden University's African Studies Centre) 이다.

7 The Guardian. "Most Europeans believe US in new cold war with China and Russia - poll" 2021.09.22. 1

이념경쟁과 연계되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국가들은 미중간 기술패권경쟁이 고조되면서 미중 양국으로부터 오는 지정학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중 양대강국으로부터 오는 ‘선택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실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 혹은 안보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다수의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특히 자원과 원자재 분야의 의존이 높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구도 속에서 세계 각국은 각자의 외교환경과 기술, 경제수준에 따라 다양한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외교환경과 정치체제에 따라 중국 기술에 대한 위협인식이 다를 뿐 아니라, 기술수준과 경제상황에 따라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전략적 지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 차이와 전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계 국가들은 모두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자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2.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전략

미중 기술 신냉전이 20세기 미소 냉전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세계 경제, 기술의 상호의존성과 미중 패권경쟁을 대하는 세계 국가들의 전략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국가들은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신냉전의 부상 속에서도 이념을 중심으로 한 결집보다는 각국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라운드의 패권경쟁 질서를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기술역량, 경제상황, 외교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서로 다른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미중간 이념경쟁이 연계된 기술패권경쟁 속에서도 세계 주요국들은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실리적, 실용적 관점에서 전략적 방향 구축 및 외교관계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독일, 호주, 일본과 EU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갖춘 미국 동맹국, 협력 지역으로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강화를 목표로 기술혁신에 주력하면서, 기술과 무역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강조는 다른 한편으로 전략적 자율성 제고를 위한 외교다변화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다자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유럽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유럽이 EU 차원의 협력과 대응을 강조하고, 호주가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등 소다자협력에 적극 관여하는 것은 이러한 다자적 접근의 전략적 기초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U가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확대하면서도 기술주권을 추구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강조하는 것은 기술경쟁력을 가진 중견국들이 추구하는 주요한 전략적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또한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일본의 기술을 안보화하고 자원화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실 신설 등으로 미중기술패권경쟁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일본 기술의 '전략적 불가결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호주는 정보동맹인 파이프라이즈와 퀴드의 회원국으로 미국 등 서구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호주혁신과학청'의 2030년 전략구상과 부처별 4차산업혁명 부서 설치, 아세안과의 스마트시티 개발협력 등은 기술혁신과 외교다변화의 주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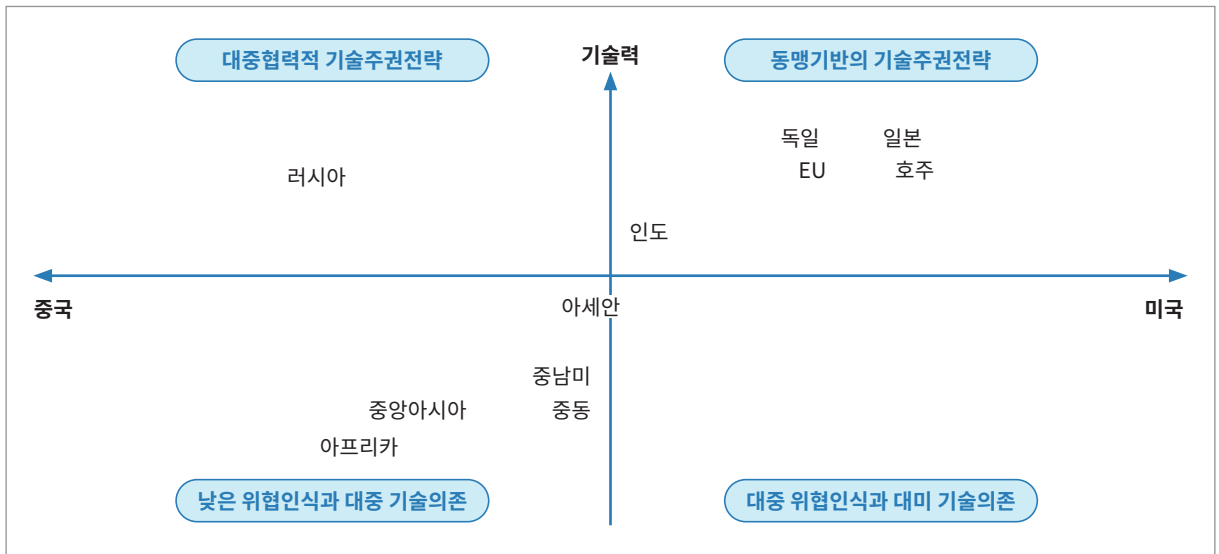
인도와 러시아는 높은 과학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화와 국제경쟁력으로 인해 대미 혹은 대중 협력으로 실리를 추구하고하면서도, 전략적 자율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우주항공 인공지능 분야 등 특정기술 우위 확보를 목표로 중국과의 기술협력을 확대하되 지나친 대중의존과 종속을 우려하여 협력 다변화와 함께 기술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는 퀴드의 기술워킹그룹 참여 등 대미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전략산업 진출을 억제하면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의 개발도상국 차원의 다자협력은 병행하면서 전략적 자율성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 지역은 중국의 기술지원에 의존하면서도 미국과 협력하는 헤징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지역 내에서도 경제적 안보적 이해에 따라 전략적 균열이 존재한다. 아세안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으로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일부 부상하고는 있으나 저비용의 실리적 측면에서 중국 기술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다만, 미중 양국과의 관계에 따라 아세안내에서도 인식과 대응 전략에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EU와 같이 지역차원의 다자적 접근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중국 기술에 우호적이고,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에서는 유럽과 미국 기술 신뢰도가 더 높다. 대다수 국가들은 특정 강대국 진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적 접근을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미중 양국의 선택압박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디지털화 발전이 긴요한 상황에서 미중 양국에 모두 열려 있으나 상대적으로 적극적 저비용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 비중이 높다. 특히,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3국은 중국 기술지원에 의존하는 한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은 미국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양면전략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중동은 일대일로 등 기반으로 중국과의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아프리카는 미중 양국의 경쟁적 디지털 지원에 따른 국익극대화를 추구하고면서도 기존에 중국 디지털 기술지원의 영향력과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국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다. 물론,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위협인식이 태동하는 상황에서 서구사회의 지원에도 적극 열려 있는 실리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남미는 코로나 시기 중국의 지원으로 대중 호감도가 제고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디지털 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디지털화 전략의 확대와 미중 영향력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남미 또한 디지털화에 필요한 실리를 취하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3.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전략 종합 비교분석

아래 그림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5개국과 6개 대륙을 미중 양국과의 관계, 기술력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다.

<그림 1>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비교분석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국가들은 동맹기반의 대응에 협력하되 EU의 기술주권, 일본의 경제안보 등 다양한 전략이 반영하듯 자국의 경제적 외교적 자율성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경계하면서 유럽과 마찬가지로 기술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중국기술을 적극 배제하면서 대중국 균형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나 미국과의 전략동맹에서는 강한 동조화 구조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기술력 측면에서 낮은 경쟁력을 보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안보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인식과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세안의 경우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과 지리적 접근성으로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존재하나, 여전히 인프라 개발 등 중국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중동의 경우 2020년 아랍 바로미터(Arab Barometer)의 조사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미국을 추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기반한 경제적 지원 증대로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중남미는 5G 기술표준을 둘러싼 미-중간 대립의 첨예한 격전지가 되면서 미중 양국과의 관계에 따라 개별국가들이 서로 다른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중간

기술경쟁에 대응한 중남미 각국의 입장은 가치나 안보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우 중국의 진출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온 지역으로 중국에의 기술, 경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도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아프리카포럼,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의 다자협력체제로 관여를 지속 높여가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주요국가와 대륙의 비교분석을 통해 인식적 전략적 지형을 종합하면 두가지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구 가치규범 동맹과 기술동맹의 부활, 대중국 의존도 축소의 추구이다. 서구진영의 대중국 경제 의존을 축소하기 위한 다변화 전략이 지속 확대될 수 있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대중국 의존 지속과 개발도상국 지원경쟁의 부상 가능성이다. 가치와 안보를 내세운 서구선진국과 경제적 이해와 발전의 과제를 내세운 개발도상국간의 위협인식 격차와 전략적 차이는 향후 미중기술패권경쟁이 새로운 남북균열의 구조를 양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G7의 B3W 등 개발도상국 지원 전략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부상에 대응하는 서구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식과 전략은 이렇듯 기술과 경제적 여건, 외교관계와 안보환경, 정치체제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주요국들의 전략적 방향은 기존의 외교관계에 일정부분 동조되어 나타나나, 대체로 균형과 실리추구의 경향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가들은 미중기술패권경쟁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주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술경쟁력이 낮으면서 디지털화 전략에 주력하는 개발도상국들은 미중 양국경쟁에서 경제적 이익 극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 속에서 미국 등 서구국가들의 기술동맹과 연대가 강화되면서 미중간 글로벌 영향력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세계 전략의 특징과 한국외교에의 함의

본 장은 국내외 학자 26명이 분석한 세계 각국의 인식과 전략을 토대로 세계 국가들의 전략적 특징과 한국 외교 전략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한 것이다.

1. 미중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국가들의 전략적 특징

세계의 인식과 전략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된 전략적 시사점은 첫째, 선진국에서부터 개발도상국까지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미래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글로벌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세계 국가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디지털 기술혁신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디지털화를 핵심적 발전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세계의 지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둘째, 다수의 국가들이 대체로 실리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기술패권경쟁 속에서도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적 전략적 이익극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유럽의 기술주권 강조, 중앙아시아의 다면전략 등은 각자의 생존과 이익을 어느 한 쪽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디지털 카자흐스탄(Digital Kazakhstan)’ 정책의 최우선 파트너로 중국을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중앙아시아 투자파트너십(Central Asia Investment Partnership)’을 출범시킨 사례는 경제적 이익극대화 전략의 주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안보환경, 외교관계에 따라 기술에 대한 위협인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권위주의 기술 대 민주주의 기술’이라는 구도는 자유진영 국가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주요한 담론이 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 비서구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협인식을 가지고 있다. 아세안 여론조사에서 “5G 인프라 건설에 어떤 회사를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중국(24.6%), 유럽(23.5%), 미국(13.4%) 순이었다는 점은 미국의 중국기술위협론에 대한 수용도가 지역마다 차이를 보임을 볼 수 있다.

넷째,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심화에 따라 기술에 대한 안보전략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 등 서구국가들은 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중국기술의 안보적 위험성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도 중국의 기술에 대한 안보전략적 인식이 태동하고 있다.

다섯째, 미중 기술패권경쟁에서 초래되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외교다변화의 추세가 강화되고, 다자적 접근이 중시되고 있다. 즉, 미중과의 양면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선택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제3지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한 전략적 방향이 되고 있다. 유럽은 양극 질서 속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EU 차원의 공동대응을 강조하고 있고, 일본도 유럽 등 제3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개별국가들이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일방적 의존상태는 회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자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2. 한국 외교전략에의 함의

첫째, 미래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혁신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또한 글로벌 혁신선도 국가(global innovation leader) 비전과 전략의 수립이 긴요하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시대 세계 국가들의 핵심 전략은 ‘혁신’이다. 기술혁신 경쟁력을 높이면서 기술의 대외의존을 줄이고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혁신경쟁법(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를 통해 장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기술을 발전시키고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종합 혁신전략을 제시하였다. 중국도 14차 5개년 계획에서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국제질서, 세력균형의 근본적 조정”의 시대임을 강조하고 2035년 중국이 세계일류의 혁신국가로 부상할 것임을 목표로 하고 있다(中国政府网 2021.03.13.). 이러한 미중간의 기술혁신 주도 경쟁 속에서 유럽, 일본, 호주 등 세계 각국은 신흥기술의 부상과 함께 이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다. 한국 또한 기술혁신이 미래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술안보와 경제안보의 강화이다.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인식은 기술분야에서의 미중갈등이 쉽게 해소될 수 없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이 안보와 규범·이념과 연계되면서 복합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러한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복잡성과 장기성에 주목해야 한다. 기술 문제를 단순히 경제에 국한하여 바라보기 보다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국가안보의 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셋째, 외교다변화를 통한 전략적 자율성과 실리의 추구이다. 개방형 기술주권(Open Technology Sovereignty), 관여적 발전(Engaging Development)이 핵심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다자협력 체제에 관여하면서 개방적 기술혁신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 세계 각국은 경제적 안보적 실리를 바탕으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리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디지털화 발전에 필요한 연대와 협력을 주도해 가고 있다. 한국 또한 유럽, 일본, 호주 등 개방적 기술주권, 관여적 기술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협력구조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한국 디지털 기술 확산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앙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 기술은 덜 위협적이며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파트너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기회를 탐색하는 외교전략의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 과학기술외교 다변화와 연대전략 강화의 필요성이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 시대 기술주도, 기술발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외교의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글로벌 외교의 범위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과학기술 외교의 다변화를 통해 한국 기술발전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화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외교의 초점을 디지털 기술에 두고, '디지털기술 한류'를 구체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외교'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술안보, 경제안보 전략수립과 이를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미중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선진국들은 기술안보,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의존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다변화 전략과 함께 세계 각국은 핵심기술의 유출 방지, 데이터 안보 등을 목적으로 해외기술의 안전성 검토, 핵심기술의 수출입통제, 첨단기술기업 M&A 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안보와 경제안보를 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기술안보, 경제안보전략과 구체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해 가는 상황에서, 한국 또한 기술안보, 경제안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이를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섯째, 중견국 연대의 필요성이다. 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 개별국가들은 양측 중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일방적 의존상태는 회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자적 접근과 외교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EU 국가들은 'Gaia-X' 도입 등 EU 차원의 다자적 접근으로 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 디지털 주권, 기술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과 싱가포르 등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직한 매개자(honest broker)' 역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국은 기술력과 문화력을 토대로 세계 중견국들의 주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계 주요국들의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과의 협력가능성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아젠다를 분석하여 협력을 주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곱째, 디지털 시대 규범과 가치, 표준 주도 리더십이 중요하다. 유럽의 디지털 시대 기술규범과 가치, 표준주도의 노력은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방향과 협력의 공간을 모색하는 데 주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등은 규범을 통해 디지털 시대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가는 주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U는 또한 2021년 인공지능 규범을 최초로 제시하면서 신흥첨단기술의 부상 속에서 규범과 가치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가고 있다.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 등 가치규범에 기반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미래 디지털 시대 글로벌 영향력과 리더십을 확보하는 주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기술규범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유럽 등과 함께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 관여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개발도상국 외교의 중요성과 제3외교 전략 확대의 필요성이다. 미중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중국의 기술 확장의 핵심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들 또한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과 선택압박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발도상국을 둘러싼 미중간 기술영향력 경쟁은 향후에도 지속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디지털화의 과제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라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디지털화에 관여하면서 혁신과 연대를 확대해갈 수 있는 주요한 제3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을 국제개발협력과 원조의 측면에서 바라보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 협력과 글로벌 진출의 핵심공간으로 인식하고 적극적 연대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V.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와 한국의회의 역할⁸

1. 2대 전략목표

1) 혁신경쟁 시대, 글로벌 혁신리더(Global Innovation Leader)

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 핵심은 ‘글로벌 혁신경쟁’이다. 미래 핵심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미래 질서를 주도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저마다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경쟁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의 혁신경쟁법 등에서 보듯 이러한 기술혁신 투자에 대한 재정기획과 입법,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의회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의회 또한 초당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혁신경쟁 시대 한국이 미래 혁신리더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방향과 비전을 토론하고 수립해 가야 한다. EU는 2001년부터 유럽혁신지수(EIS: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를 구축하여 매년 EU 회원국의 혁신 및 EU와 글로벌 경쟁국과의 혁신성과 비교를 실시하고 있다. EU는 높은 혁신지수를 기록하는 국가들을 혁신리더그룹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혁신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혁신리더국가로서의 역량을 갖춰가기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 의회가 혁신리더국가로서의 부상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토론하고 필요한 전략적 과제들을 수립해 가야 한다.

2) 개방적 기술주권(Open Technology Sovereignty) 추구

유럽과 일본 등이 미중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다양한 도전들을 극복해 가기 위해 기술주권과 기술안보를

⁸ 본 장은 세계 주요국의 인식과 전략 연구를 토대로, 필자가 도출한 의회에의 제언임

내세우는 상황에서 한국 또한 기술에 대한 안보적 고려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유럽이 추구하는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주권 강화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방적 기술주권(Open Technology Sovereignty)을 기조로 핵심 첨단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유럽 등 기술선진국들과의 기술혁신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한편으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기술과 자원 네트워크의 다변화를 통해 특정국가에의 기술 혹은 자원의존도를 낮추면서 개방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해 가야 한다.

2. 핵심 실천과제

1) 기술혁신, 기술안보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

세계 의회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부상과 함께 기술혁신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과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가고 있다. 미국 116대 의회는 의회 역사상 가장 인공지능에 이슈가 집중된 ‘AI국회’라고 평가받을 만큼 의회가 신기술분야에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 유럽의회 또한 기술의 안보적 검토를 위한 다양한 입법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호주도 ‘외국투자개혁법 개정’, ‘대외 관계법’ 제정 등을 통해 중국의 기술위협에 대응해 가고 있다. 일본의 ‘규범형성전략의원연맹’ 등은 기술규범 주도를 위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기술혁신과 기술경쟁 시대 기술안보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미래 국가발전과 안보에 있어 신기술의 중요성이 지속 강조되는 오늘날의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회 또한 기술혁신과 기술안보의 강화를 위한 입법과 예산 등, 종합적 중장기적 비전 하에 국가 중장기 미래를 준비해 가는 초당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전개해 갈 필요가 있다.

2) 한국형 혁신경쟁법(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및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 설계

미중 기술패권경쟁은 전세계 국가들이 미래 질서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회가 신기술분야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제안한 ‘혁신경쟁법’은 미국의 과학기술발전과 AI,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기술역량 강화, 인재 양성 등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자하고 중국기술견제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수출입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 기술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 등도 기술혁신 역량과 기술자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술주권의 핵심은 결국 기술역량의 강화이다. 한국의회 또한 중장기 기술혁신을 위한 한국형 ‘혁신경쟁법’을 수립해가야 한다. 혁신경쟁법 등의 입법을 통해 기술혁신과 기술안보를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설계하고, 정부의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하고, 핵심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과 인재양성의 계획을 입법과 예산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3) 기술안보, 경제안보 대응 위한 중장기 구상과 입법 강화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 등 기술선진국들은 사이버 안보와 기술관리를 위한 법령,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규범 형성을 위한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은 다양한 입법을 통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핵심기술 유출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해 가고 있으며 일본은 경제안보상을 신설하여 기술문제에 대한 안보적 검토를 확대해 가고 있다. 세계 각국은 핵심기술의 유출 방지, 해외기술의 안전성 검토, 핵심기술의 수출입통제, 첨단기술기업 M&A 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의회 또한 기술유출과 공급망 위기 등 다양한 기술안보와 경제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설계와 함께 필요한 입법들을 추진해 가야 한다.

4) 과학기술 외교 강화와 ‘기술-외교-안보’ 통합적 접근

21세기 디지털 시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과학기술혁신과 함께 과학기술 연대에 있다. 과학기술 교류를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네트워크의 다변화로 경제안보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글로벌 기술혁신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의회 또한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외교 종합전략 수립과 통합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의회는 주요국 의회와의 교류와 협력활동을 통해 과학기술외교 공간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관련 상임위는 물론 의회외교포럼 등의 차원에서 전개하는 주요국 의회와의 외교네트워크는 이러한 전략소통과 교류, 외교적 성과를 활성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계와의 적극적 연대를 위해서는 주요국들의 대응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 의회는 민간의 싱크탱크와 전문가 풀을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토론하는 것은 물론 전략적 판단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의회도 글로벌 환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국제정세에 부합하는 입법활동과 외교 활동이 가능하도록 민간싱크탱크,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규범외교, 가치외교/공공외교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 강화

다자주의 규범적 국제질서 수호 및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가치에 대한 수호는 정부보다 국회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범과 가치외교가 강화되는 속에서 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6) 개발도상국 외교의 중요성과 한국의 제3외교-의회의 역할 강화

개발도상국을 둘러싼 영향력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 또한 디지털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 외교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 외교 확대에도 의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외교 확대를 위해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등 지역통합체 차원의 외교전략이 강구될 필요가 있고, 개발도상국의 지역통합체별로 구성된 의원포럼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 외교를 확대하면서 디지털 외교, 기술외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7)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가칭) 신설 검토

세계 선진국들은 ‘누가 신기술, 핵심기술을 선도하느냐’ ‘누가 신기술을 토대로 한 외교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주도해가느냐’의 혁신경쟁, 연대경쟁에 주력하고 있다. 미래 국제질서에서의 영향력과 위상이 기술의 발전과 밀접히 연계되는 상황에서 한국 또한 미래 질서를 대비한 중장기적 관점의 혁신전략, 연대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회는 한국형 혁신경쟁법, 글로벌 과학기술외교 구상 등을 집중 토론하고 중장기 비전을 수립할 미래전략 특별위원회(가칭) 신설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차정미 외. 2021.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 세계의 전략과 한국외교에의 제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1-16호.
- Cha, Jungmi et al. 2021. 『The Future of US-China Tech Competition: Global Perceptions, Prospects, and Strategies』. Th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Research Report. 21-17.
- Harry Harding. 2015. “Has U.S. China Policy Failed,” The Washington Quarterly. 38 (3).
- Francis Fukuyama. 1989.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16, 3-18.
- Timothy Stanley and Alexander Lee. “It’s Still Not the End of History.” The Atlantic. 2014.09.01.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4/09/its-still-not-the-end-of-history-francis-fukuyama/379394/>
- The Guardian. “Most Europeans believe US in new cold war with China and Russia – poll.” 2021.09.2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sep/22/most-europeans-believe-us-in-new-cold-war-with-china-and-russia-poll>

국제전략 Foresight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미·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유재광 (前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9.24
2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유재광 (前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11.5
3	미중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 ‘기술혁신’과 ‘기술동맹’ 경쟁을 중심으로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8.12
4	포스트 팬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	김태경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10.14
5	미래전쟁과 군사-기술의 연대: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	차정미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11.11
6	빅데이터(GDELT)를 통해 살펴본 국가 간 갈등의 변화	박성준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11.25
7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한국외교에의 함의와 의회의 역할 :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global innovation leader)” 비전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	2022.2.14

- 이 자료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
www.nafi.re.kr (미래연구-미래보고서-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